구동에서

한강 노벨문학상이 더욱 각별했던 것

김 종 민
논설실장

한밤중 헬기에서 내리는 계엄군 행렬에서 광주를 떠올렸을 것이다. 온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한 걸음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죽음을 각오한 진심과 용기로 맞섰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광주는 보통명사가 됐다. 시·공간을 건너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다.

문학이란 무엇일까. 언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진실되게 묘사하는 예술 분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곤 한다.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오른 한강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했다.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긴 대표작 중 하나인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된 것도 그랬다.

이 소설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체념했을 때 우연히 접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에서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를 읽고선 벼락처럼 알게 됐다고.

'국민의 나라'다. 국회가 즉각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도록 한 것 모두 주권자들이 해냈다.

반헌법적인 계엄령이 발령되고 정국이 혼돈스런 와중에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멈추려고 하고,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며 제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았다… 젊은 경찰과 군인들의 태도도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적극적인 행위였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대사의 비극을 작품 소재로 다룬 한강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잔잔한 어조로 가장 부끄러운 현실을 소환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군사독재의 유산으로 치부되며 금기어가 됐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날 새벽 공수부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창문을 깨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자명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였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해 선포할 수 있다'. 헌법 77조항에 어긋났다.

1980년 5월 그때처럼 광주는 공포감, 분노로 밤을 지샜다. 군대를 앞세운 계엄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말살한 반역이자 내란이다. 광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혔다.

단 1초라도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었다. 추운 겨울에 다시 거리 투쟁에 나섰다. '시민의 힘'으로 계엄 해제에 성공한 국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도 통과시켰다. 마침내 '질서 있는' 파면의 시간에 들어섰다.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2024년 12월, 누구도 납득 못할 계엄령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군인도, 경찰도 너무 많이 달랐다. 애초부터 '성공한 혁명'은 불가능했다. '놀라게 해 미안하다'고 기막힌 사과를 했던 피의자는 권한이 정지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당하다. 굴욕적으로 막을 내린 친위 쿠데타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국민이 또 이길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실패한 반역'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 이 땅에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빛의 혁명'이라 부른다. K-민주주의는 더 굳게 다져질 것이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다.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했다. 한강의 바람처럼 국민들은 압도적인 폭력과 억압에 지금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44년 전, 5·18민주화운동을 겪었고, 배웠던 학습효과다.

계엄군의 총에 쓰러진 열다섯살 열사 동호의 이야기를 담은 '소년이 온다'는 당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곳이었던 상무관에서 첫 장면을 시작한다. 한강은 소설의 처음과 끝에 '촛불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인간은 부서지기 쉬우며 연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축적된 힘을 가졌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 던지는 메시지일까. 내란 사태의 한복판에서 노벨상 수상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다.

문화난장

변화된 결혼관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김 종 분
前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얼마 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 하나, 모델 문가비가 톱스타 정우성의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다. 정우성은 자신이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사유리도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례다 그녀는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모가 됐다. 이처럼 비혼출산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요즘 우리의 결혼관이 크게 변화됐음을 알리는 증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더라도 이같은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청년들의 비율이 39.7%였다. 10 명 중 6명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거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었다. 교제와 동거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자기 선택 중심으로 변한 것이다. 특히 20대 남성 43.1%, 20대 여성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고, 비혼 출산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14.2%로 조사됐다.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2.2%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 부모나 비혼 부모,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아 통계에 포함된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1년 7천700명에서 2022년 9천800명, 2023년에는 1만900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인 셈이다. 혼외 출생아는 당연히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지만 아버지는 인지라는 법적절차를 거쳐 생부가 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해야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간다. 2023년 4월30일 헌법재판소는 혼외자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출산과 혼인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여긴다. 그 때문에 비혼 출산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프랑스는 1999년에 '등록 동거혼(PACS, 팍스)' 제도를 도입한 후 비혼 출산율이 62%로 늘어났다. '팍스'는 결혼하기 싫어하는 청년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에게 혼인 베리어 즉 혼인장벽을 낮춰준 정책이다. 2005년에는 민법을 개정해 혼중 출산자, 혼외 출산자 구분을 없앴다. 프랑스에서는 법률혼을 혼인이라고 하고, 팍스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팍스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똑같이 가족수당, 실업수당을 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20년이 지난 현재, 등록 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했고 30% 정도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팍스가 긍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이 비혼 커플의 출산정책을 펴고 있다. 네덜란드는 등록파트너십을 행하고 있고 스웨덴은 동거법을 제정해 등록된 동거 가정에 대해 혼인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비혼 출산이 늘어나자, 1997년 아동권리개혁법을 만들어 혼외자와 혼중자에 대한 개념을 없앴다. 비혼 출산율이 약 41%에 달하는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2002년 통일친자법을 만들어 혼인 중 출산, 혼인 외 출산과 같은 용어를 없앴다.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앞으로 혼외 출생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지금의 출산정책과 양육정책은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로 인해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출산과 혼인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고 이제 우리사회도 등록 동거혼이나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해야 할 때이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헌법정신 아래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동반가정등록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입법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로서는 발 빠른 대응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가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비혼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응원한다면 차별과 편견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질 것이다. 비혼출산 부모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결혼관에 맞춰 적절한 제도와 정책 수립이 행복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독자투고

산불 예방 온 국민의 참여·실천 필요할 때

최근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 산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했다. 2014년 492건 137ha에서 2022년 756건 2만4천797ha, 2023년 596건 4천992ha으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3% ▲쓰레기 소각 13% ▲논·밭두렁 소각 12% ▲담뱃불 실화 6% 순이며, 계절적으로는 봄과 겨울에 전체 산불의 83%가 집중돼 있어 이 시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은 발생하면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한 번 잿더미가 된 산림은 복구에 40-100년이 걸리며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불법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금물이다. 산불은 원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인 만큼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안기오·장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탄핵 집회 '선결제 나눔 릴레이' 백서 발간 타당하다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를 편하게 가져가라는 '선결제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다. 시위에 함께 하지 못한 시민들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 영하의 추위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온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최 측 비상행동이 '광주 제2의 주먹밥 운동'으로 명명하고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44년 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 나눔을 재현한 것으로 평가해 기록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5월 어머니들이 나눠준 주먹밥을 먹고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대동정신'의 가치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에도 시민들은 일찌감치 패딩, 목도리, 장갑 등을 껴입은 채 민주광장으로 모여들었다. 4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윤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생중계를 시청했으며 급기야 탄핵안 통과에 일제히 환호성이 터졌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승리에는 후원으로 마련한 방한용품, 먹거리 등도 큰 도움이 됐다.

오월어머니집,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 새마을회, (사)솔잎쉼터 등은 떡국과 주먹밥, 어묵 등 따뜻한 음식과 핫팩을 지원했고, 민주광장 주변 카페, 붕어빵 가게 등에는 미리 계산해둔 음료와 간식을 나누며 대동 세상을 이뤘다. 물심양면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어 겨울 한파 속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MZ를 비롯해 모든 세대가 어울려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전 세계는 K집회를 주목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펼친 선결제 릴레이가 '제2의 주먹밥 운동'으로 기록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상행동은 우선 종합보고서 형식의 도서를 준비한다. 정확한 절차와 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전국의 사례도 수록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과 연결되는 백서 발간에 시민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

지자체 요구 수용 정부 과감한 슈퍼추경 검토할 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증액 없는 감액으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소비·투자 심리 위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말 특수가 실종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보다 더 힘겨운 현실을 호소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도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하나 신규 사업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세입이 많이 줄어 긴축 편성한 상황이다. 전남은 SOC 분야가 평소 1조 2천억원에서 7천억원대로 대폭 감소해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및 확장 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치경찰 운영 재원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김영록 지사는 1인당 지원금 20만원의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부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새해 예산안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치권 시각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과감하게 금융 위기, 코로나 대응에 버금가는 슈퍼추경에 나서야 한다. 연말 연시다. 또 설 명절이 멀지 않았다. 재정의 온기가 퍼질 수 있길 바란다. 비상 시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는 추경안 반영 전략 마련과 함께 부처와 사전 협의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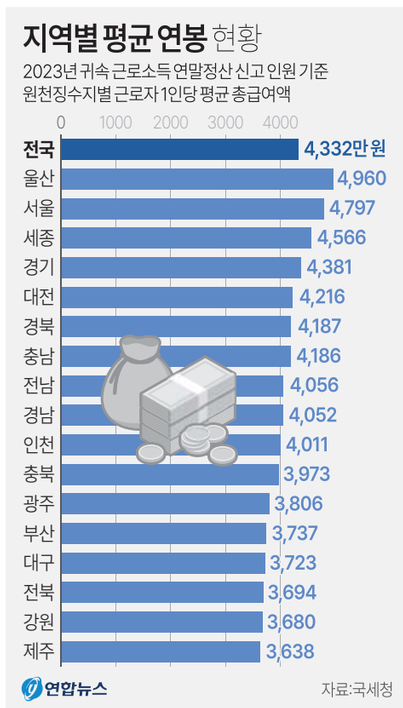
작년 '억대연봉' 139만명…1인당 평균 급여 울산>서울>세종순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4천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2천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천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천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속해 증가세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4천797만원), 세종(4천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